3. 한민족 통일과 통일방안

권 만 학 (경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 서론

올해는 광복 50년 분단 50년이 되는 해이다. 금년은 과거 남측의 노태우 대통령도 북측의 김일성 주석도 다같이 통일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해로 설정했었다. 분단 반세기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 남북(한) 양측은 이제 한민족 통일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간 분단돼 있던 단일 민족들이 거의 통일됐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의 현황은 여전히 통일로부터 멀리 위치해 있다. 이같은 평가는 특히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남북측에 의해 자발적으로 타결됨으로써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정점을 이루었던 데 비하면 실로 뼈아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남북측 학계 인사들이 모여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아직도 통일의 원초적인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통일을 위한 지금까지의 정치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자괴적 반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회의가 학술적으로 진지한 통일논의의 시작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기 책임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본 논문의 주제인 "한민족의 통일과 통일방안"에 관해 무용한 정치적 논쟁보다 논리성과 현실성에 입각한 진지한 토론이 개진되기를 기대한다.

본 발표에서는 우선 남북 양측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며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을 천착해 본다. 다음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남북측의 (체제상) 구조적 변화와 그러한 변화 속에서 가능한 선택을 추출, 이를 통일경로 및

통일방안과 연계해보고자 한다.

2) 남북 통일방안 비교

남북 당국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한국전쟁 이후 대내외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모습을 달리해 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제환경, 남북의 상대적 위치, 남북측 내부 정세 등의 세 요소에 의해 불균등한 영향을 받으며 진행됐다.

(1) 남북측 통일방안의 변천

북측의 통일방안은 1950년대 평화통일론, 1960년대 "련방제" 통일방안(1960. 8. 15), 1973년 이래 "고려련방공화국" 창립방안(1973. 6. 23), 1980년대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1980. 10. 10)으로 전개돼 왔다.

1950년대 북측은 통일의 방법으로서 평화를 강조하였다. 50년대를 통하여 부단히 강조되었던 것은 외국무력(미군) 철수,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건설, 국민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당국과 민간에 의한 통일논의, "다면적" 교류 및 접촉 등이다. 요약하자면 평화통일론은 통일의 궁극적 체제로서 사회주의, 통일정부 수립의 방법으로서 총선거, 통일의 전제로서 미군철수에 기초했었다. "련방제" 통일방안은 대체로 평화통일론의 여러 요소들을 견지하면서도 두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 미군 철수가 총선거의 전제로서 명시되었다는 점이며 둘째, 남북총선거가 실시될 수 없을 경우 과도적으로 "남북조선의 련방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연방제에서는 남북의 현 정치제도는 그대로 두고 중앙정부적 성격의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연방제안은 "대한민국"을 언급함으로써 남측의 실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련방공화국"안은 "련방제"안에 비해 연방의 국호를 "고려련방공화국"으로 정하고 통일문제 논의를 위해 당국이 배제된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요구했다. 1980년 발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북측의 종합적 통일방안으로서 현재까지도 공식 통일방안으로 견지되고 있다.

한편 남측에서도 통일방안의 내용과 형식은 변화해 왔다. 한국전쟁시 이승만 정부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을 주장했으나 휴전협정 후 이는

구호에 그치고 구체적으로는 남북 총선거가 아닌 북한에서만의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이라는 전쟁 이전의 주장으로 복귀했다. 4.19 혁명 후 민주당 정부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방안"을 내어놓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적색독재"나 "백색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민권 자유를 보유하는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른바 "선건설 후통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북측 정권을 정치적 실체로 그리고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는 한편 1973년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통해 국제관계에서의 평화공존을 추구하였다. 1980년대 들어 전두환 정부는 남측 최초의 종합적 통일방안이라 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민주, 자유" 등을 추구하는 통일공화국 완성을 목표로 이의 기초가 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한 대표로 구성되는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기초토록 하며 헌법비준과 신정부 구성을 모두 남북한 총선거에 맡기도록 하였다. 또한 과도적 조치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정상적 교류 관계를 형성하고자 제안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9. 11)에서 통일과정을 구체화시켰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을 거쳐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완성했으며 이는 현재 남측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남아있다.

(2) 현존 남북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그 기본철학으로서 "민족공동체 건설"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1] 자유민주주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민주"에 의해 묵시적으로 표현된 것을 명문화한 것인데 이는 궁극적 체제에서 핵심적으로 관철되어야 할 가치가 "자유"와 "민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궁극적 정치체제라면 이에 이르는 통일과정에서의 정책은 "민족공동체

1) 이하 남측 공식 견해에 관해서는 통일원, 「통일백서 1994」, 제2장 제3절 참조.

건설"로서 "국가체제 조립"이나 제도적 통일보다 민족통합과 실질적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이전의 "선교류 후통일"이 체계화된 것이다.

통일원칙으로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됐던 「자주」, 「평화」, 「민주」를 채택하고 있다. 통일과정에 관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 화해협력단계, 2) 남북연합단계, 3) 통일국가 완성단계 등 3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긴장완화, 화해정착, 교류·협력 실시 등을 목표로, 2단계에서는 전단계에서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 단계에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남북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창설운영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통일의 완성단계로서 통일국가의 형태는 단일국가인데 그 구체적 모습은 남북연합 단계 말기에 제정될 통일헌법에 의해 그려질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헌법의 제정과 내용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방안이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을 모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일헌법 내용과 통일정부의 총원은 남북한 국민투표(총선거)에 의거할 것으로 유추된다.

이같은 통일방안을 축약적으로 표현하자면 공동체 건설을 통한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의 자유민주주의이다.

고려연방제에서 연방은 이전의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과도적" 성격이었던 데 반하여 최종적 형태로 제시되는 완성형 통일방안이다. 여기서 사상과 제도는 "절대화"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외형상 남북 각자의 사상과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통일의 원칙으로서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견지하고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1개 연방정부와 2개 지역자치정부로 구성되는데 연방정부는 방위, 대외관계 등을 관장하며 지역정부는 나름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내치에 주력한다. 연방정부는 남북 및 해외 동포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련방회의"이며 이의 상설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가 실무집행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궁극적 모습의 통일국가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대외적으로는 "10대 시정방침"에서 천명되고 있듯이 비핵 중립주의 등을 추구한다.

1990년대 들어 북측의 고려연방제 창립방안은 약간의 변형을 맞는다.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

지 않는 원칙"과 이에 기초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고려연방제 창립방안이 통일국가의 궁극적 모습에 치중했던 반면 신년사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위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으로서 "잠정적으로는 지역자치정부에 더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점차적, 단계적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3) 남북 통일방안 비교와 문제점

양측 통일방안은 그간 일방주의적이었던 만큼 일방적이라는 형식상의 공통점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내용상 대척적인 차이점을 포함해 왔다. 통일방안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 전문에 원론적으로 언급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협상되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통일방안은 자신의 체제에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통일방법에 있어서도 '통일전선' 또는 '흡수통일'을 명확히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타협되기 어려운 갈등을 빚어 왔다.

양측 통일방안은,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기술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핵심적인 문제에서 차이를 보이며 바로 이러한 차이가 서로에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첫째, 궁극적 통일국가의 성격이다. "고려연방"은 영어 표기("confederal")와 달리 내용상 국가연합보다는 서구식 연방에 가깝다.[2] 그리고 궁극적 통일국가는 남측의 정치체제보다 북측의 "인민민주주의"에 가깝다. 남측의 우려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네가지 "선결조건"을 고려할 때 더욱 증폭된다.[3] 북측은

2) 과거 남측에서는 북측의 연방제를 영어로도 "confederal"이라 표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의 자치성을 들어 국가연합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이었다(예를 들면, 신정현,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의 전개와 목표," 신정현편, 「북한의 통일정책」(서울: 을유, 1989), 273쪽 참조). 그러나 외견상 자치적인 것으로 보이는 지역정부는 사실상 "련방상설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는 것도 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의 연방제보다 단방제에 더 가깝기까지 하다.

3) "선결조건"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 관해서는 통일원, 앞의 책, 233-235쪽 참조.

남측에서의 사회민주화, 인민정권의 수립, 주한미군 철수, 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한 통일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측은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 자발적으로 합의되었던 통일 3대 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을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와 정면대립하게 되었으며 북측에 "흡수통일" 우려를 증폭시켜 주고 있다.[4]

둘째, 통일의 방법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 총선거를 통일의 결정적 방법으로 상정하고 있다. 반면 고려연방제에서는 당국이 주요한 역할에서 배제 당한 연석회의 방식으로 통일에 도달하고자 한다.[5] 무엇보다도 통일방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변화해 온 남북측의 상대적 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쉬운 총선거라는 방식은 남북 지역의 인구수보다 자기 측에 유리한 남북측 주민의 숫자가 클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호되었다. 남측의 1인당 GNP가 북측을 앞지른 1970년대 이전 총선거는 북측이 선호한 방식이었으나 이후 남북측 사이에 그러한 선호는 뒤바뀌었다. 역점은 통일전 교류·협력("합작")의 강조와 당국의 역할에 관한 남북측의 입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핵심적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태에 있어 남북측의 통일방안은 상당 부분 수렴되었다. 특히 신년사에서 가미된 국가연합적 성격은 남북연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까지 해석된다. 하지만 당국간 통일논의의 시작을 가로막는 것은 여전히 전제조건이다. "선결조건"이 제시된지 15년이 지났지만 북측 당국은 이중 특히 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는 사회민주화와 "문민파쇼"의 퇴진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6] 남측은 남북측 사

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주사파 파동, 조문 파동 등의 와중에서 출현한 만큼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수정에는 남한 국내정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5) 연석회의 방식은 "대민족회의,"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나타났으며 구성원도 정당, 사회단체 대표, 해외동포들은 꾸준히 포함됐으나 당국은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였다.

6) 주한미군 철수 부분은 모호한 상태이다. 북한의 일부 관리들은 남북기본합의서 타결 직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미군의 역할이 동북아 지역의 균형자(balancer)로 바뀌고 날로 남한의 군비가 북한을 훨씬 능가할 가능성이 높

이의 모든 관계 증진을 핵문제 해결에 연계시켰었다.

통일을 추구한다는 구호에 앞서 이러한 현실적 대립은 남북측 당국이 현재 과연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남측 당국은 공표된 통일방안에 걸맞는 화해·협력 단계의 대북정책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여 주었다. 핵, 경수로 등에서 보여진 남측 정부의 정책은 극단적 대결의 양상을 띠었으며 이는 주로 남측 내부정세가 지배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냉전적 사고와 기득권층의 지배를 반영한 것이다. 기득권 정치(politics of vested interest)는 북측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측 역시 남북의 (적어도 경제적인) 상대적 위상과 국제환경이 남측에 유리하게 변한 현시점에서 여전히 통일을 원할 것인가 회의적이다. 주관적 강조와 달리 북측 당국은 과연 현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연방제를 받아들이려 할 것인가?

전제조건은 현상태에서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양측의 태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남북 갈등의 핵심에 있는 체제 문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다. 통일의지와 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체제변화와 연관된 통일경로에 비추어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통일경로와 통일방안

남북측 체제의 미래 변화를 예측함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갈등적이다. 또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많다. 하지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미래예측의 마지막 시금석은 역시 미래에 실제로 나타날 현실이라는 것이다. 둘째, 미래의 예측은 구조적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가능성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7] 현재 시점에서 통일과 통일방안은 현상(現狀)의 대결성으로 인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태적

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여전히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할는지는 의문이다. 남한의 1년 국방예산은 북한이 분산은폐했다고 남한이 추정하는 것을 포함한 총방위비의 3배를 넘고 있어 남북한 군비격차는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7) 여기서 구조적이라 함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다가오는 막기 어려운 큰 변화를 의미한다.

시각(dynamic perspective)에 의한 변화, 시간이 지나면 여건에 따라 양측 시각과 통일방안도 바뀔 수밖에 없음을 포착하지 않으면 본 주제에 대한 현실적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통일에 대한 입장차이의 핵심에 놓여있는 이념/체제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국가사회주의와 중진적 자본주의의 대립이다. 사회주의의 시조로 불리는 칼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여기서 상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혁명론과 사회주의의 도래 부분은 체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좋은 단초를 이룬다.

마르크스는 두 개의 일견 모순적 혁명론을 펴고 있다. 하나는 구조적 혁명론이다. 사적 유물론(histomat)은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 단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하락, 평균 이윤율이 하락하는 일반적 경향, 자본가가 되기 위한 유인의 저하 등에 의해 사회주의에로의 구조적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견은 맞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사회주의의 물적 조건은 자본주의가 만개했을 때 충족된다는 것이다.[8]

이러한 이론은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지탱되기 어려웠다. 당장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프롤레타리아에게 자본주의가 만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정치적으로 요구되었으며 결국 등장한 것이 "공산당 선언" 등에서 보여지는 자원주의(自願主義)적(voluntaristic) 혁명론이다. 양극화(polatization)되고 궁핍화(pauperization)되는 당시 초기 자본주의의 양상을 보건대 사회주의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적 혁명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실제로 그러한 성공의 시작을 기록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실현은 단순한 자원주의(自願主義)적 문제가 아니었다. 이후 나타난 현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예견한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띠었다. 스탈린이 강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장애는 "자본주의의 포위(capitalist encirclement)"였는지

8) 구조적 혁명론의 입장에서 노예제, 봉건제처럼 자본주의도 15세기에서 25세기까지 10세기간 지속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Edward Malecki, "Theories of Revolution and Industrialized Societies," *Journal of Politics*, Nov. 1973, pp. 962-3 참조.

모른다. 선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세계역사적(world-historical) 혁명이라는 조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화되었다.

20세기 국가사회주의의 대실험 결과 자본주의는 여전히 역사상 가장 생산력을 혁명적으로 폭발시키는 체제로 남아 있다. 마르크스의 말처럼 자본주의는 여전히 후진국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비추고 있다.[9] 여기서 또 다른 극단에 빠지는 오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옛 국가사회주의에서 나타난 최근의 혁명적 변화가 "역사의 종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박약하다.[10] 자본주의가 자신의 묘혈을 파고 있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할는지도 모른다.

본 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이 20세기말 보여주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이들 국가들은 혁명 초기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포위"를 극복할 필요성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본주의적 낭비의 제거와 혁명적 열성이라는 여건이 구비됨으로 인해 급속한 생산력 증대를 기록했다.[11] 그러나 혁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후자는 한계에 다다랐다. "양적 성장"은 "질적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더구나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는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말았다. 최근의 세계적 대변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20세기적 대응을 이룬다.

옛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은 세 경로를 거치며 변화했는데 소련, 동구,

---

9) "... these tendencies winning their way through and working themselves out with iron necessity. The country that is more developed industrially only shows, to the less developed, the image of its own future"(Karl Marx, *Capital*, vol. 1, New York: Vintage, 1977, p. 91).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 지역이 이미 자본주의라는 일부 종속이론가들의 주장과 이를 둘러싼 유통(circulation)주의와 생산양식론자들의 논쟁은 유명하다.

10)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89. 그의 '이념주의적' 주장에 대한 Allan Bloom 등의 '현실주의적' 반론에 대해서는 "Responses to Fukuyama",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89 참조.

11) 이 시기 사회주의를 근대화로 가는 세 경로 중 하나의 길로 본 고전적 저작으로는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1966) 참조.

중국 모델이 그것이다. 이중 비교적 집권 엘리트들에게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은 역시 중국모델로서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모델에서는 개혁·개방이라는 근대화 목표의 수립과 그 과정의 통제에 관한 공산당의 합의가 성공의 관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개혁·개방이 진전될수록 세계자본주의는 중국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자본주의적 제도와 관행을 요구해 왔으며 계속하여 이의 확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시점에서 중국정권은 국가사회주의와 권력유지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선택밖이다. 이러한 구조적 압력에 직면하여 그들은 결국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중국 공산당은 남측이 과거 보았던 관료권위주의 체제의 패권적 집권당과 유사하게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측 역시 다른 국가사회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경로를 밟아 왔다. 북측은 60년대 중반 경까지 급속한 발전을 거두었다.[12] 그리고 이후 옛 국가사회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왔다. 이제 북측에게도 변화는 구조적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여 북측에게 현상(現狀)은 선택 범주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선택은 소련, 동구, 중국 모델일 것이며 현명한 당장의 선택은 역시 중국 모델 즉 개혁적 사회주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측은 이미 그러한 모델을 좇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13]

---

12) 이 시기 북한을 목격한 Joan Robinson은 이를 "조선의 기적(Korean Miracle)"이라고 불렀다(Robinson, "Korean Miracle," *Monthly Review*, Jan 1965).

13)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신설과 최근 외국 투자 유치는 옛 북한의 정책과 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일성 주석은 "제국주의자들의 … 《평화적 이행》 전략"을 경고한 바 있으며(1991 신년사) 또한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었다(1960.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 정책변화에서는 또한 정책의 정당화를 통한 주민설득도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중국이 개혁개방과 함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4개항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강조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집트의 낫셀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좌회전"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차는 우회전하는

남측 자본주의 역시 상당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탈냉전의 국제환경은 경제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남측에는 경쟁력 제고라는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다른 한편 민주주의의 신장은 내부적으로 과거 성장 일변도 정책이 간과했었던, 복지,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외부불경제로 야기된 환경오염의 해결, 권위주의 체제에 수반됐던 불공정 관행의 척결 등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킬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개혁을 필요로 하며 개혁적 자본주의에로의 이행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구조적 요구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고 남북측 지도층이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14]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찾아온다면 남북측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반면 통일이 될 때까지 양측은 또한 민족 정통성 경쟁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반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통일은 점진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이때 관건은 양측의 정책이며 그러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내부정세이다. 양측이 제한되나마 관계개선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경우 남북 사이에는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상정된 1단계와 유사한 것이다.

일단 교류·협력이 진전되기 시작되면 당국간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하며 결국은 여러 제도와 기구들이 남북을 연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교류·협력은 그러한 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구조적 압력을 수반할 것이며 결국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2단계로 상정된 남북연합에 준하는 체제의 등장이 요구될 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무엇보다도 변화의 폭이 큰 북측의 정책이 보다 더 변화의 시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상당한 변화의 문턱에 이르면 남북 양측의 주도적 역할이 요청된다. 이때가 되면 통상적 의미의 연방제는 매력적인 선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연방제는 적어도 당시 관계되어 있는 남북측 정권과 주민 모두의 이익을 충족시켜줄, 문자 그대로 연방시켜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연방제를 단방제로 이행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당시의 지도층과 주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것을 "우리식"이라고 설명했다는 일화는 매우 시사적이다.

14) 물론 실제에 있어 보다 급격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변화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그때의 정치적 선택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교류·협력을 "흡수통일" 기도로 간주해 온 북측에게는 위에서 상정된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의 단계가, 연방제를 줄곧 거부해 온 남측에게는 위의 연방제 단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태적 분석은 구조적 요구가 남북 양측 지도층과 주민들의 사고를 계속하여 변화시킬 것임을 예측케 한다. 현 시점에서도 양측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체제적 우려를 불식시킬 경우 통일방안에 대한 타협은 가능할 것이다. 즉 남측은 단일중앙정부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궁극적 형태와 체제를, 특히 그것이 "흡수통일"의 우려를 주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를 미래의 선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상적 의미의 연방제에 북측이 주장하는 지역 자치정부의 개념이 가미된 형태의 수용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상적 의미의 연방제는 남측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보다 발전할 경우 자연스럽게 접근해 가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정치발전의 예들은 개발국에서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른 한편 북측 역시 선결조건을 철회하고 위와 같이 남측의 통일방안이 변경될 경우 두려움 없이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을 —— 남북연합에 대한 명칭 변경을 고려할 수도 있다 —— 수용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통일의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에서는 통일이 주로 경제적 필요에서 오는 것으로 가정돼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측은 "민족해방," "노농해방"이라는 입장에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측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족국가"의 완성을 위해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에 공통된 것은 1천년 이상의 통일국가를 이룬 한민족에게 분단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선전과 인도주의 차원을 넘어 통일의 동력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구에서 보이는 민족국가는 자본주의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제국의 중간단계에 등장했었다. 자본주의의 현단계는 유럽공동체(EC) 등에서 보여지듯이 다시금 민족국가를 넘어서는 광역국가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한민족에게도 통일은 이제 인도적, 민족적 당위성을 넘어 경제적 현실에 의해 요구되고 있으며 탈냉전의 국제환경은 이

러한 요구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양측 통일방안의 핵심에는 사상/체제 문제가 놓여 있음을 보았다. 체제 문제는 남북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냉전을 자아내고 있다.[15] 여기에 더하여 남북측 내부에서는 전환기적 대응의 덫미를 잡는 기득권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체제 문제에 관한 한 남북측 모두는 구조적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남북 모두가 이러한 요구에 위에서 보여진 최상의 대응을 택한다면 통일경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통상적 의미의 연방제가 결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결론은 물론 정태적 분석이 아니라 동태적 분석의 결과이다. 즉 남북의 현 지도층이 현재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러한 경로는 거부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국제환경과 남북측 내부가 변함에 따라 양측 정권과 그들의 인식에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가장 현실적인 다음 단계로서 이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화해·협력, 남북연합, 연방의 3단계가 그것이다.

만일 이 예후가 옳다면 즉 이것이 미래에 도래할 수밖에 없는 한민족의 경로라면 현재 요구되는 것은 남북 양측 지도층의 통찰이며 구사고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지도력이다. 지금도 가능하며 향후 더욱 가능해질 선택은 남측이 통상적 의미의 연방제 단계를 삽입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정부를 미래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며 북측 역시 선결조건을 철회하는 것이다. 양측이 현재 합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은 양측이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착목하는 것이다. 만일 양측이 현재의 통일방안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이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반통일적인 현실을 결과할 것이다.

---

15) 이러한 극단적 입장은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통일원, 「통일백서 1994」, 61쪽)이라는 김영삼 정부의 입장과 "우리 민족의 통일은 오직 김일성주석의 련방제방안대로만 실현되어야 한다"(로동신문 95. 6. 14)는 북한 입장에서 잘 대조되고 있다. 강조 필자.

만일 이같은 타협적 통일방안이 양측 내부정세에 의해 불가능하다면 현실적 차선책은 통일의 당위성과 양측이 공감하는 관계개선만을 강조하고 갈등적인 (특히 양측 체제에 중추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의도적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남북 양측의 관계개선이 당면과제이다. 탈냉전화라는 정책전환은 남북 양측에 구조적 요구로 다가오고 있으며 탈냉전적 국제환경에 의해서도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회는 상대적 낙후를 면할 수 없다는 문화적 진화론(cultural evolutionism)은 남북측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다. 내외적 도전 속에서 남북의 관계개선과 협력은 양측에 기회이다. 전환의 지연은 민족적 과실을 탈민족화시킬 것이다. 양측에 요구되는 것은 초민족적 이념주의가 아니라 한민족 현실주의이다.[16] 이러한 기조를 견실하게 확립하고 무조건적으로 대화를 재개하여 협상하는 것이 오늘 요구된다. 상호관계에 있어 남측의 중국, 베트남 관계와 같이 그리고 북측의 미국, 일본 관계와 같이 체제적 문제에서는 타국을 대하듯이 보편주의를, 호혜적 문제에서는 한 민족 내부 관계로서 특수주의를 취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제 뼈아픈 과거가 더 이상 생동하는 한민족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16) 한민족 현실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졸고, "우리의 남북대화 추진 방향,"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주년 기념: 세미나 회의록」, 1995. 2, 참조.